

국힘 19일 새 원내대표 선출...추대론 vs 경선론 '팽팽'

비대위 첫 회의서 선관위 구성

친윤 그룹 "주호영 추대" 목소리

중진의원 10여명 출마 저울질

국민의힘이 오는 19일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첫 회의에서 원내대표 및 당 국회 운영위원장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송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선관위원장을 맡고, 양급희·박형수·한무경·박대수·윤두현·전봉민 등 원내대표 6명이 선관위원으로 참여한다.

원내대표 선거는 당규에 따라 오는 16일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치러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닷새 동안 펼쳐질 원내대표 선거 레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됐다.

당내에서는 최다선이자 직전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하자는 주장이 일부 초·재선 친윤(親尹) 그룹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지만,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경선의 경우 거론되는 후보군만 해도 김학용·윤상현·홍문표(4선), 김태호·박대출·윤영석·윤재욱·이중배·조해진(3선), 이용호(재선) 의원 등 두 자릿수에 달한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선출방식과 관련, '합의추대론이 있고 경선론이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일할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인 건 다 아실 것"이라고 전제한

뒤 "과거 이완구 전 총리가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된 사례가 한 번 있긴 하고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는 제가 합의 추대된 케이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어떤 의원님들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시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며 "제가 이렇다저렇다 논쟁할 문제가 되지 못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현 원내대표는 지난 4월 8일 선출돼 아직 1년 임기까지 7개월가량 남았지만, 당 내홍과 국정 난맥상으로 불거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책임론'을 피하지 못하고 지난 8일 사의를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나 "당의 지도 체제를 조속히 안정적으로 확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 수석의 예방을 받고 "우리 비대위에 주어진 임무를 잘 인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집권당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아무래도 국정 동력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 상황이 초래돼서 우선 정부 쪽에도 미안하고 국민께도 송구하다"며 "빨리 이런 비상 상황을 종식하는 게 저희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국정운영의 한 파트너인 당이 빨리 안정돼서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는 모양이 되길 희망한다"며 "정 위원장은 경험도 아이디어도 많은 분이라 잘 이끌어주리라 생각한다"고 덕담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이 수석은 덕담도 있고 치밀해서 늘 아무튼 많은 지도변달을 해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대통령 "반도체에 우리 생사 달려"...반도체 특위 오찬

반도체 산업 발전 국회 협력 당부

민주당 출신 양향자 위원장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특위)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 누리홀에서 반도체특위 위원 및 관련 학계·산업계 인사들과 함께 식사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고 하고 4차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라 우리 생사가 걸려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늘 준비해야 하는데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장기 과제도 아니고 실시간 (대응)해야 하는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이 있어 든든하다. (국회에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달라"며 "저도 반도체뿐 아니라 관련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겠다. 정부도 선제적으로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무 출신

으로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의원을 참석자 중 먼저 거명하며 "삼성전자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우리 양향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반도체 특장을 여는 등 취임 직후부터 반도체 산업 발전과 인재 육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드러내왔다.

오찬에는 김용현 경호처장과 최상목 경제수석, 강경성 산업정책비서관, 김일범 의전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 대통령 해외순방 후 여야 대표 회동 추진

이진복 정무수석 "방식은 무관"

민주당 요구 단독회담엔 선 그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 순방 이후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해외순방 다녀오셔서 (각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회담) 방식은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좁 되면 한번 논의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의 언급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하는 데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민주당측이 선호하는 일대일 회담 형식에 대해서는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대통령은 영수회담 용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과거에 여당의 총재가 대통령이었을 때는 영수회담이라는 얘기가 널리 있지만, 지금은 대통령과 당 대표의 만남"이라

고 지적했다.

그는 "구시대애 쓰던 얘기를 계속 쓰지 않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어느 정도 여야 정치권 상황이 정리되면 그때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만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지난번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상황이 정리되면 조속히 만나자'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은) 그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 대표와 첫 통화를 하면서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당 대표님들과 좋은 자리를 만들어 모시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날 '영수회담' 용어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간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영수회담' 대신에 '여야 지도부 면담'이란 표현을 써왔다.

민주당은 대통령실로부터 공식 회동 제안이 온다면 관련 논의에 적극 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회동의 형식이나 시기에도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준석 "당헌 개정은 무효"...국힘 "李, 소송 자격 없어"

가처분 심문 1시간 공방

李측 5차 가처분 신청 예고

28일 4차 가처분 심문 속행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법정에서 1시간여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심리로 열린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지급과 같은 근본조항을 개정하는 경우 당헌 원칙에 따라 정당대회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전국위원회 의결만 거친 개정 당헌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당 전국위의 당헌 개정안 의결 추진이 소급금지원칙에 반하고 반헌법적인 행동이라며 이날 1일 전국위 개최 금지를 주위적 신청(주된 신청)으로,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를 예비

적 신청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권위' 등을 당의 비상 상황으로 정한 개정 당헌을 의결했다.

이 전 대표는 법정에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선임을 무효로 한 1차 가처분 결정 취지에 비춰볼 때 비대위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최고위가 이미 해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5차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새로운 비대위 설치로 당 대표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헌 개정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 "판례상 (원칙이)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내용에만 적용할 수 있

다는 것이고, 계속 중이거나 그 이후의 사실까지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당은 법원 판단 이후에도 운영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지난 8일 신청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금지 가처분(4차 가처분) 사건은 애초 이날 함께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전날 국민의힘 측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28일로 심문 일정이 변경됐다.

주 전 위원장 등 이 전 비대위원을 상대로 한 2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이 전 대표 측에서 취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1차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심문은 이날 종결하기로 하고 3차 가처분 신청, 4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속행 심리를 28일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 작품은 국민 김도연, 길은우, 김소담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2 대학생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질병관리청

2022학년도 정부광고 영역 제1교시 제1회 HPV 면역고사

성명 수험번호

1. 다음 중, 2022 HPV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르시오.

- ①: 만 12세 여성 청소년
- ②: 만 13세~17세 여성 청소년
- ③: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 ①과 ③가 병원에 HPV 예방접종을 하러 갔다. 이때 HPV 예방접종에 드는 총 비용을 적으시오. (0원)

* 지정의료기관 및 전국 보건소(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오늘은 꼭 '맞으세요'

알맞은 답은 더 늦지 않게 백신을 맞는 것 뿐입니다.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